서울시, 현대 GBC 조기 착공 지원… 인허가 3개월 단축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일자리 창출 효과·경제 활성화 제고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 기업이 인구유발 저감 대책을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재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남아 있는 상태다. 모두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로 시는 최대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 절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심의 기간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의 'GBC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향후 27년간 2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인 503만명의 4분의 1에 달하는 121만500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GBC가 착공되면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공공기여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대차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8㎡)에 지상 105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 GBC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는 2023년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서울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방안 '4대 목표' 제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방안 모색위한 토론회 열려
제도 개선·기금 확충 등 역량 강화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협의회 발전을 다짐하고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나선 가운데 협의회와 함께 추진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물자 지원과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제재 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통일부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방안과 사업 사례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 사례 발표에서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 파주시의 ▲파주 개성 인삼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 도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소개됐다.

한편,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승열 기자 kimsy@

민선 7기, 시정 최우선에 '경제·일자리'

우선 순위, 경제·일자리·환경 順
4년간 잘해온 분야 '복지·건강' 꼽아

서울 시민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경제·일자리' 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이 생각하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는 경제·일자리(27.1%), 환경(19.3%), 주택·도시재생(19.2%), 복지·건강(11.2%)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및 안전(7.4%), 교통(5.5%), 행정·재정(4.4%), 여성·가족(3.4%), 문화·관광(2.6%)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서울 시책 및 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65%로 '관심 없다'(34.3%)보다 30.7%포인트 높았다.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 편이다'가 51.9%로 가장 많았다. '못한 편이다'(24.6%), '매우 못했다'(6.4%), '매우 잘했다'(4.8%)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평가(56.7%)가 부정적인 평가(31.1%)보다 많았다(25.6%포인트)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가장 잘해온 분야로는 복지·건강이 응답률 1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화·관광(16.7%), 교통(16.2%), 주택·도시재생(7%), 재난대비 및 안전(6.3%), 환경(5.2%)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를 보면, 민선 6기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만족도가 낮았던 분야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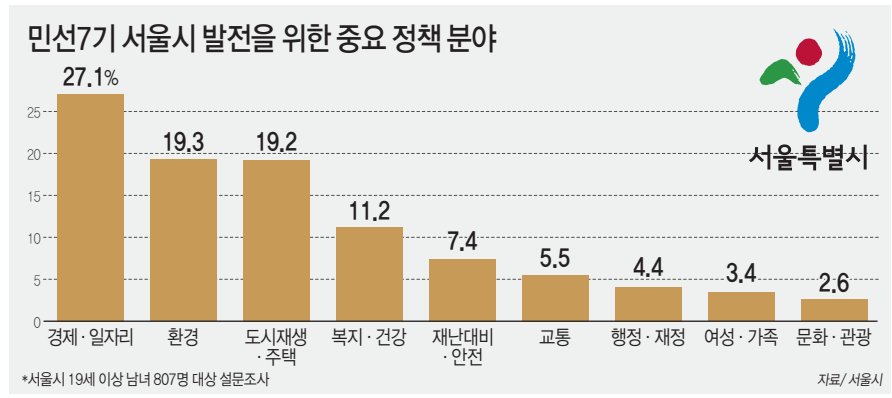
민선 6기 주요 정책 9개 분야 중 만족도에서 꼴찌를 차지했던 경제·일자리 분야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1위로 꼽히고, 뒤에서 4위를 기록한 환경 분야가 2위로 올라왔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높은 실업률(32.1%)로 나타났다. 급격한 물가상승(28.5%),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붕괴(18.2%),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민주화의 지체(11%), 새로운 성장산업 부재(8.7%)가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 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등의 정책을 통해 4년간 연평균 41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박원순 시장(사진)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성장, 도심 활성화, 혁신 창업에 집중하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지난해 서울서 교통사고 299명 사망… 역대 최저치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4명 줄어든 299명이며, 일평균 0.82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2017년 3.4명보다 0.4명 줄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기준으로 스위스(2.6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과 유사하며, 일본(3.7명), 캐나다(5.2명), 프랑스(5.4)명, 미국(11.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00명, 2016년 376명, 2016년 348명, 2017년 343명에서 2018년 29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2.1명으로,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62%(184명)를 차지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다.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시는 2018년 주요 간선 도로에 10곳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0개를 확충한다. /김현정 기자